

2023년도 국무조정실 자체평가 결과

(주요정책 부문)

2024. 2월



국무조정실

목 차

I. 평가 개요	1
II. 평가 결과	3
III.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 결과	5
①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5
②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6
③ 외교안보 현안 점검·지원 및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7
④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갈등관리 ·	8
⑤ ODA 통합 정책·전략 마련 및 사업효과성 제고	9
⑥ ODA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10
⑦ 특별자치시·도별 맞춤형 지원	11
⑧ 국정과제 관리·평가	12
⑨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13
⑩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	14
⑪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 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15
⑫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16
⑬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품질 제고	17

14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18
15	재정·금융 정책 조정·지원 강화	19
16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정책 조정·지원 강화	20
17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조정·지원 강화	21
18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22
19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심판결정의 신뢰 제고	23
20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지원	24
21	국민생활 밀접 및 국가재정손실 부정부패 예방	25
22	범부처 탄소중립 정책 수립·조정 및 국민소통 지원	26
23	보건·복지정책 추진 지원 및 조정 강화	27
24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강화	28
25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 강화	29
26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정책 조정·지원 강화	30
27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추진 지원 및 현안관리	31
28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32
29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33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34

국무조정실

I. 평가 개요

(1) 중점 평가 방향

- 국정운영의 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평가대상) '23년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29개 관리과제
 - (평가기준) '정책성과' 등 5개 항목에 대해 10개 지표로 평가
 - (성과측정) 국무조정실이 직접 추진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과제에 대하여 정책 마련 과정 및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체 위원(18명)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14명, 77.8%)
 - 총 4개의 분과위원회(국정일반, 평가·규제, 경제, 사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점검 및 평가 진행을 통해 자체평가의 전문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등 평가 업무 총괄 지원을 위해 기획총괄 정책관실 내 평가지원총괄팀(정책관리팀) 구성

□ 평가방법

-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작성·제출(정책관실, '23.11월)
- 민간위원 서면 평가('23.12월), 분과위별 대면 평가('24.1.15~18)
-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24.2월)

□ 평가지표

-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측정방법	정성	정량
1. 계획수립의 적절성(30)	① 과제선정의 적절성	5	- 관리과제로 국조실의 주도적 추진 업무를 선정했는지 여부	○	
	② 정책 환류의 충실성	15	- 자체평가위 및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 반영 여부	○	
	③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 △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위 지표와 비중복	○	
2. 시행과정의 적절성(20)	① 추진 일정의 충실성	5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
	②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5	- △계획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대응 △현장 의견 반영 △정책 대안 마련	○	
	③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	10	- △관련 기관과의 협업 추진성과 달성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소통	○	
3. 정책성과 (50)	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	○
	②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30	- △정책·갈등 조정 등 대표 사례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4. 공통지표 (+5)	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2	- 사회적 가치 실현 구체적 사례	○	○
	② 성과관리 지침 이행 충실도	+3	- 성과관리 충실성 및 운영 협조 여부	○	○
총점		100 (+5)			

II. 평가 결과

(1) 총 평

□ '23년도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8개 정책관실에서 추진하였던 총 29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 ▲매우 우수 2개 ▲우수 4개 ▲다소 우수 4개 ▲보통 9개
▲다소 미흡 4개 ▲미흡 4개 ▲부진 2개로 나타남

※ 상대평가 등급 기준(상위 비율) : ▲매우 우수(5%) ▲우수(5~20%) ▲다소 우수(20~35%) ▲보통(35~65%) ▲다소 미흡(65~80%) ▲미흡(80~95%) ▲부진(95~100%)

□ 총 29개 관리과제의 7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73개(94.8%) 성과지표는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4개 성과지표는 목표치 미달성
- 목표치 미달의 주요 원인은 예측지 못한 정책환경 변화로 분석

(2) 주요성과

□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핵심 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등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①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대응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이상 동기 범죄 등 민생현안 ▲지방시대 구축 등 미래 대비 과제 등 해결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범정부 대책 수립 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

②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 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민간전문가 주도의 규제 심판회의 등 범정부적 규제혁신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향후 약 10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3) 개선 · 보완 사항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등의 과제는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①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 피 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 모색 필요

②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조세불복 청구인(대리인 포함)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소통 노력 지속 필요

(4) 평가 결과 종합

연번	과제명	등급
1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우수
2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매우 우수
3	외교안보 현안 점검·지원 및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보통
4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갈등관리	미흡
5	ODA 통합 정책·전략 마련 및 사업효과성 제고	보통
6	ODA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미흡
7	특별자치시·도별 맞춤형 지원	다소 미흡
8	국정과제 관리·평가	보통
9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부진
10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	다소 우수
11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 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매우 우수
12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보통
13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품질 제고	다소 우수
14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보통
15	재정·금융 정책 조정·지원 강화	다소 우수
16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정책 조정·지원 강화	우수
17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조정·지원 강화	보통
18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부진
19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심판결정의 신뢰 제고	다소 미흡
20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지원	다소 미흡
21	국민생활 밀접 및 국가재정손실 부정부패 예방	다소 미흡
22	범부처 탄소중립 정책 수립·조정 및 국민소통 지원	보통
23	보건·복지정책 추진 지원 및 조정 강화	다소 우수
24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강화	미흡
25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 강화	우수
26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정책 조정·지원 강화	미흡
27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추진 지원 및 현안관리	우수
28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보통
29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보통

Ⅲ.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 결과

1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우수

□ 주요성과

- 총리 주재 국정협의체 통한 국정현안 적기 대응 및 정책 조정
 - 주례회동 및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요 정책 조정*
 -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문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등 76건
- 선제적인 홍보·리스크 이슈에 대응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홍보점검회의를 통해 One-Voice 대응체계 및 정책소통효과 제고
 - 리스크대응회의에서 정책 발표 前 관계부처간 심층적인 논의를 주도하여 불필요한 오해 및 정책 혼선방지
- 잠재적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통한 공공갈등 예방·해결
 - 예상 갈등과제 발굴 및 선제적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갈등 예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갈등과제에 대한 컨설팅·자문 진행 등, 공공기관의 갈등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
 - * ▲단국대 ▲한양대 ▲전북대 ▲(사)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정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 리스크 및 갈등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필요
- 당정협의 및 대국회·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체 보완 필요

□ 주요성과

- 소관 분야(행정자치·법무·치안 등)의 위험 관리, 정책 조정 주도적 추진
 - 「공공질서 확립TF」를 통해 무분별한 집회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집단노숙·도로점거·과도한 소음 등 국민 일상의 평온권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기여
 - 「보이스피싱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논의 →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23.7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3.11월) 등 효과적 대응
 - * 작년 동기간 대비 30% 감소 추세(억원) : ('21년) 7,744 → ('22년) 5,438 → ('23.10월) 3,428
 - 신림동 강간살인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적극 대응 → 국무총리 긴급 지시 하달 및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23.8월)
 - * ▲특별치안활동 지속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업입원제 도입 검토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민관 협업체계 강화 등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추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23.6월)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을 통해 일원화(자치분권-균형발전)된 지방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총 3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지방투자 활성화방안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방안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등 논의
 -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23.2월),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총 6개 분야 57개 과제 선정·추진
 - * ▲(분야)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주요과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 전용 권한 위임 확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경제자유구역 승인권 확대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에 국조실의 선제적·주도적 역할이 포함될 필요
 - 국무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국조실의 부처간 이견조정이나 수정 의결, 보류 건수 등을 적절하게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 주요성과

○ 외교안보 분야 정책현안 조정·점검 및 지원

- (사드기지 정상화) 주민지원사업* 최종안 마련(국조실 주도) 및 지상 출입 보장, 기지 개선공사, 환경 완료 등 정상화 목표 달성
 - * 주민지원사업 총26건(성주군 13건/4,475억, 김천시 9건/1,292억, 칠곡군 4건/890억)
 -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전자과 영향 無) 결과 발표 직후, 주민지원사업 주민 공청회 등 지역 발전 청사진 제시로 주민 반발 완화 효과
- (포항수성사격장 훈련 재개) 국조실 점검 회의(‘23.1월) → 해병대 사격 일시 재개(‘23.4월) → 사격훈련 영구 재개 합의(‘24.1월)
 - ☞ ‘민관군 협의체 구성 후 국조실 주민지원 사업 논의’ 계획을 주민 설명 후 양해 각서 체결 및 해병대 포사격 훈련 재개(4월) 등 효과 발생
 - * ‘24.1월, 해병대 사격훈련 영구재개 및 민관군 협의체 구성 합의(주민대책위-국방부 등)
- (안보상황 점검) 안보실·합참과 연계하여 신속 상황공유·보고, NSC 등을 통해 상황 분석·대응방안 마련 등 24시간 안보상황 주시
 - * ▲北 탄도미사일 발사(‘23년 ICBM 등 총 21회 발사, 現 정부 43회) ▲VIP순방기간 北도발 대응방안 수립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11.22)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절차 지원 등

○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 (외교네트워크 확대) 아프리카·중남미·카리콤 등 그간 활발히 교류하지 않았던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 외교지평 확대
 - * 말리위토고·카메룬·베냉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10.29~11.4), 장관급(11.13~19) 방문 / 국무총리 최초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7.2-9) / 국조실장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12.7-13, 대통령특사)
- (우방국 협력) 유럽과 기후변화·원전·방산협력 및 우크라이나 관련 연대 등 강화
 - * 영국·스웨덴·오스트리아·루마니아(5.8~11), 체코·폴란드(9.11~15),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10.8~15), 노르웨이·핀란드(10.29~11.4), 프랑스(11.12~15, 26~30) 등 6차례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4월 국빈 방미 주간, 정부부처(외교·국방·보훈·문체)·지자체 등에서 추진되는 기념행사를 총괄·조정(메시지 관리 등)
 - *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4.25) ▲해군 호국 음악회(4.26) ▲플로리다 주지사 접견(4.26)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명비 헌화(4.27) ▲버지니아 주지사 접견(4.28) ▲미군기지 한성방문(4.28) ▲미하원원단 접견(5.1) 등
- (한일관계 개선) 「김대중-오부치 선언 행동계획」 계승·복원을 위한 부처별 미래 지향 협력사업 발굴, 관계개선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총리 메시지·행보 관리
 - * 한일일한협력위 대표단 접견(1.18), 서울 도교포럼 환영리셉션 축사(5.12),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9.1) 조화 전달(고위급 최초),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축사(9.15), 한일축제한미당 오찬 참석(10.22)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건수 위주 성과지표 한계 →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주요 성과

-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관련 주요 현안 등을 신속하게 검토·논의 →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 미군기지 반환 이행 상황점검 등을 위한 회의(33회), 동두천·의정부·평택 등 현안 사업 지원(34회) 및 제도개선(7회) 등 관련 회의 주재

- 정책 이해관계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간 갈등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소통 추진 강화

* 국회의원 방문(7회), 지자체장 면담(14회), 현장 방문(4회) 등

- 주한미군기지 반환 → 주민·군 활용 등을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

- 캠프 마켓 잔여구역(약 26만㎡), 감악산(약 3만㎡)·불모산(약 779㎡) 통신기지, 진해 통신센터(약 490㎡),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약 890㎡)

-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자체 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관계 법·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개발부담금 감면, 오염토 정화 자문단 지자체 참여 등 과제*(26개) 발굴

* '22~'23년 과제 총 26개 중 3개 완료, 7개 진행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환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인 개별 조치계획 기반으로 성과지표 작성 필요

- 추진 일정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분기별)과 추진실적(연간)을 일치 시킬 필요

□ 주요성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연 4회)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전략 조정 및 수립
 - 유·무상 주관기관(기재·외교부) 및 시행기관 대상 의견수렴과 이견 조율, 수원국 협의를 통해 유·무상 정책·전략 수립
- *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농업/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 아세안 ODA 추진전략 등
- ODA 사업 연계·조정
 - 총 144건 294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 방지)을 통한 ODA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수원국 수요 변화에 적시 대응
 - 최근 정치 거버넌스 변동 또는 신규 개발계획 수립 등 중대한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9개국*의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 *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라오스, 베트남,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필리핀
- 인도적 위기 신속 지원
 - 튀르키예 강진 발생시(23.2) 역대 최단시간(50시간)내 최대규모(152명)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명 구조 및 구호물품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기존에 하던 업무를 넘어서신 혁신적인 ODA 추진 필요

□ 주요 성과

- ODA 규모 확대 및 다양한 시행기관 참여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단·평가 강화
 - (국별종합진단 신규 추진) 협력국 관점에서 우리 ODA 지원전략, 추진과정, 사업성과, 공여국과의 협조체계 등 종합적으로 분석 실시
 - * '23년 캄보디아(왕립학술원)·인도네시아(LPEM) 국내·협력국 연구기관간 합동연구를 통해 협력국 관계기관 설문심층인터뷰, 타 공여국 사례분석, 공관-현지 사무소 면담, 현지 조사 실시
 - (기관역량진단 실시) 사업 중규모(10억원 이상) 시행기관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 진단, 미흡기관 대상으로는 컨설팅 실시
 - * '23년도 12개 시행기관 대상 진단지표별 분석, 기관별 평정(평정위원), 해당기관 통보 등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관으로 공여국간 ODA 점검, 성과를 공유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 수검('23.10월) 총괄
- 내실있는 사업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 및 교육과정 개선
 - 상위규모(사업규모 100억 이상) 시행기관 대상 자체평가 최소건수 확대
 - * (기존) 연 최소 2건 또는 사업수나 사업규모의 10% → (개선) 연 최소 3건 또는 사업수나 사업규모의 10%(향후 평가결과 및 시행기관 평가여건 등 고려 단계적 조정 예정)
 - '국제개발협력 평가 교육과정' 운영(기본-심화-고급, 연2회)을 통해 시행기관 ODA 담당자의 평가역량 강화 지원
- ODA 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관계기관간 통합적 정보 공유를 위해 ODA Korea 누리집(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홍보 강화
- 유·무상 통합으로 개발협력주간 및 개발협력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언론보도·SNS 등 통해 국민 관심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ODA 성과관리 강화 차원에서의 평가결과 환류 이행관리 등 개선 노력
-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반 확대 등 대외협력 역할 강화 노력 필요

□ 주요 성과

- (제주)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23.7.11.) 및 중앙권한(81건) 이양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 타 특별자치시·도 선도 모델로 발전
 -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한 강화,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도민 이익 제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청정제주 환경관리 강화 등 주요과제(30건)
 -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관광·교육·의료·첨단) 투자(총 7조 5,134억원)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 흡수***로 외화 유출 억제 및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지역일자리: 11,004개 창출(사업연계형 6,584개, 사회공헌형 3,118개, 인프라지원형 1,302개, '23.63)
 - ** 1인당 GRDP:('02) 12.8백만원→('21) 29.9백만원 / 관광객:('02) 451만명→('22) 1,389만명
 -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생 수 지속 증가('21년 4,582명→'22년 4,811명→'23년 4,874명), 해외유학수지 누적('11~'23) 1조 2,725억원 절감 추정('23년 1,529억원 절감 추정)
-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 국회규칙 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등 행정수도 완성 및 균형발전에 기여
 - * 국회세종의사당: 지원협의회(국조실, 행복청, 세종시, 국회사무처)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국조실, 대통령실,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 ** ('24년 예산)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원, 제2집무실 설계비 10.2억원
 -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한 도래('23년말 종료)에 따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23.12.26. 개정·시행), 재정특례 연장('23→'30)
 - 투자유치협의회 등을 통해 세종테크밸리 내 기업·투자 유치, 공동·복합캠퍼스 조성 지원 등 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자족기능 강화
- (강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23.6.7.)으로 기존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강원도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독자적 성장 모멘텀 확보
 - *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 후 최단기간 본회의 통과
 - 강원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및 법 개정 시 미반영된 과제* 및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 관련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교육자치조직권 부여,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중 '현안과제 관리실적'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원위원회 개최실적'을 성과지표로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검토 필요

□ 주요성과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점검·관리 체계 운영
-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운영(격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입법상황 점검, 홍보방안 등 논의
 - * 국무1차장 주재, 국조실-국정과제 주관부처 등 참석
- 신년사·연두 업무보고·광복절 경축사 등 주요 계기 국정과제 조정·보완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보완 추진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국조실-관계부처-민간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연 3회, 총 36개 현장)
- 국정과제 성과의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분석 및 부처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지원(상·하반기)
- 민생 관련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11.30)
- 정부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를 종합 정리한 120대 성과자료집 및 차별화된 변화상을 담은 30대 핵심성과집 발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정과제 점검·관리 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수렴된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
- 성과지표 설정 시 국정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

□ 주요성과

- '06년 성과관리 제도 도입 이후 국조실의 지속적인 점검·조정을 통해 '계획수립-집행-점검·평가-환류'의 선순환 고리 정착
 -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인성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 책임을 담보*하는 등 전 부처의 성과관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안착**
- * 46개 부처청 모두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에 반영 중('22년 2월 기준, 반영 비율 평균 34.4%로 권고기준 30%를 상회)
- **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높고, 목표치 수준도 적절하다는 응답 85.6% (자체평가위원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2월, 전년대비 2.4%p ↑)
- 능동적으로 언론·연구자료 등에서 지적인 정책현안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정책이슈 컨셉페이퍼 작성(행정연구원 협업)을 통해 최근 정책현안 이슈를 사전분석하고 정책분석과제 발굴 추진
- 국정과제 법안 중 부처간 이견있는 법안 7건 대상 조정 추진, 이견법안별 국조실 조정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조정·협의
 - 이견 해소법안 6건, 조정 진행 1건 진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흡·보완 기관 중심의 컨설팅으로 다른 부처가 평가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컨설팅 대상 기관 확대 검토 필요
-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주요성과

○ 협동연구체계 개편 : 연구기관의 주도성 강화

- 연구회 주도 Top-down에서 탈피, 연구기관 주도 기획방식으로 재편, 연구기관·관계부처 등 참여 확대
- 미래전망, 국가아젠다 등 분석, 국정 주요이슈 도출 + 정책 수요 반영(관계부처) → 융·복합 연구과제 선정·추진('23.6~)

○ 연구기관 평가 개선 :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획일적인 평가방식, 중복·복잡한 평가지표 등을 개선, 각 기관의 핵심 추진과제 위주의 성과관리로 전환*

* 기관별로 중점추진사업(3~5개) 중점평가, 정량지표 확대, 보고서 등 부담 감축

-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23년도 평가편람 마련('23.6), 연구기관 설명회('23.11) 등 의견수렴 → 평가계획 확정('23.12)

○ 사업·예산 정비 : 기본 임무(Mission) 중심으로 재편

-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기관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은 이관 → '24년 예산에 반영('23.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정책을 통해 도출된 효과를 단순한 산출중심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

□ 주요성과

- (규제혁신전략회의) 연 4회의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로 47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여, 이해관계자 갈등·다부처 복합규제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갈등 규제 전향적 효과**
 -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외국인고용 △산단 입지 등 **킬러규제 적극 효과**(8.24)
 - 서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실증특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입지역 활용 등 **작지만 실생활에서 체감가능한 민생규제 167건 효과**(11.22)
- (규제심판) 연 17회의 규제심판회의 개최로 11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소관부처 불수용·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한 **핵심규제를 민간전문가 주도로 합리적 개선**
 -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등 **핵심 갈등과제 중점 해소로 이해단체간 합리적 상생도모**
-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제도, 민·관 합동 킬러규제 효과 TF 등 **범정부적 규제혁신추진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 1년8개월 간 1,700여 건의 핵심규제·갈등과제 등 개선조치 완료, 규제혁신 완료과제 등을 통해 향후 4년 이내 투자 창출·매출 증대·부담경감 등 약 10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기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의 다양성을 고려해 성과지표 설정 시 정성적 평가 보완 필요
-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업 강화

□ 주요 성과

○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추진

- 규제혁신 플랫폼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극 운용 → 기존 규제로 사업이 어려웠던 1,139건의 사업승인
- 23조 1,827억원 투자유치, 9,116억원 매출증가, 1만 8,289명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 달성('23.4분기 기준)
- 조속한 실증개시와 법령정비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완료('23.7월)
 - * ①접수후 특례심의위 상정기한(90일) 설정 ②부결과제에 대한 재심의(60일) 신청 ③부가조건 변경 신청 ④법령 정비계획 수립·통보 의무(60일) 설정 등
- ICT·산업융합 등 기존 6개 분야에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 추가 확대
 - * 모빌리티('23.10월 시행), 순환경제('24.1월 시행)

○ 지속적인 신산업 기업 애로 청취와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이 직면한 규제애로 해소
 - *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회로 5대 신산업 분야(ICT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기업의 규제 애로 청취, 규제 개선방안 마련·권고
- 총리 주재 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현장 소통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4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한 법령정비 이행 노력 강화 필요

□ 주요성과

-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품질 제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중요규제 개선 권고율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방지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사후규제영향분석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기존규제의 합리화에도 기여
-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효율화
 - 분과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본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규제심사 추진('23년, 분과위 54회 개최)
-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품질 및 순응도 제고
 - 신설·강화 규제심사, 규제제도 개선 등을 위해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 영향평가 관련 부처(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과 적극 협업
 -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국민·기업 등 의견도 적극 수렴
- 규제연구센터·비용분석위 검증 등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 관리를 통해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증가 억제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계기관 협업 노력은 인정되나, 협업 성과의 가시성 제고 필요

□ 주요 성과

-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 규제혁신추진단 '22. 8월 출범한 신규조직으로 '23년도 17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90개의 규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출범 이후 덩어리 규제 총 19개, 개별규제 총 124개)

- ICT·과학기술,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생활 불편해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사례 상시 근로자수 기준 규제개선(4.17),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9.20) 등

- (덩어리 규제 선제적 발굴) 복잡한 이해관계로 수십년간 방치된 덩어리 규제를 민·관·연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의 주도하에 선제적·능동적으로 추진하여 '23년도 42개의 신규과제 발굴

- 추진단 내 전문위원(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을 활용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거쳐 신규과제 발굴

* '23년도 덩어리 규제 개선 전체회의 총 34회(총리 주재 17회, 차관 주재 17회) 개최

- (현장소통 강화)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연구·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연간 총 554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시행

-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foryou.better.go.kr/) 개설·운영('23.5.2.~)

- MZ 세대 등 국민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쇼츠(동영상), 웹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

* 「덩어리 규제 개선(안)」 발표시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덩어리 규제 특성상 성과 창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정책 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보완 검토

□ 주요 성과

- 경제여건 및 상황변화 모니터링, 의제화
 - △ 경제동향 △ 주요정책 상황지표 등을 분석하여 대응 필요사항 검토 및 핵심 현안에 대한 대응책 선제적 논의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 대통령 주재 민생현장간담회('23.11.9), 관계부처TF 회의(5.25, 10.23, 11.14) 등을 개최, 단속실적 점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논의·확정
- 론스타 ISDS 대응
 - 정정신청 인용('23.5.9)으로 48.1만불 감액 및 집행정지 연장신청 관련 정부의견 인용('23.12.16,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 등
- 재정·세제 운영 지원
 - △ '24년 예산안 △ 세법개정안 △ 세수재추계 등 주요 재정·세제 현안에 대해 부처간 정책협의 조정·지원
- 소비자정책위원회(8월) 개최
 - 디지털·그린경제 등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확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정 여건 및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금융기관 부실 대출, 부동산시장)과의 소통 노력 보완 필요

□ 주요 성과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플러스 전환('23.10), 외국인 투자실적 역대 최다 등 경제활력 성과 도출
 - 수출기업 간담회(3회,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정책 협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 각종 간담회 계기 접수된 투자애로 적극 해소 추진, Invest Korea Summit('23.11, 국무총리 참석) 계기 9.4억불 투자신고 등 성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데이터 경제 등 미래 먹거리 핵심기반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3.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7, 7개 지역), 특화단지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방안('23.12) 등 첨단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등 데이터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청사진 제시('23.1)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경제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관계부처 회의('23.1) 등 사전점검을 통한 2023기후산업국제박람회 성공 개최('23.5), 제6차 수소경제위('23.12)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마련 등
 - 수산물도매시장 內 온누리상품권 가맹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애로 극복방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 조정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 필요

□ 주요성과

- 동절기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가축전염병 대응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방역대책 선제적 수립 등 지원, 방역관리 철저('23.9)
 - 특히, 국내 최초 발생한 소 렘피스킨병을 발병 익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 등 초동방역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하여 확산 조기 차단
- 상당 기간 논의돼 온 고질적인 갈등과제인 개 식용 종식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도 정부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특별법(안), 업계 전·폐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안) 마련
- 대중교통 혼잡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내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 지원
 - 특히, 출근시간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은 열차 시격 단축, 버스 중차, 버스전용차로 개통 등 통해 혼잡을 관리
- 전세사기 피해의 구조적 차단 위해 범부처 협의, 특별법 제정('23.6) 등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완방안 마련('23.10)
 - 피해자 등 10,256건이 결정('23.12월 기준)되었으며, 경공매(절차대행, 우선매수권 부여)·금융·주거(공공임대)·법률(무료소송) 등 지원 지속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무조정실 역량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과제 선정 및 추진 필요
-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분야에서 국무조정실 차원의 조정 대응 강화 필요

□ 주요 성과

- 심판사건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인적·물적 인프라 및 운영방식 보완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도모

* 청구인의 권리의식 제고에 따른 사건접수의 급증 및 심판사건의 전문화, 복잡화

- 처리지연의 원인인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기간 단축(30→20일) 및 재심기일 지정기한 설정 등 사건처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심판조사관 직접사건처리제 도입, 조정검토담당자의 직급상향·세목별 담당제 실시로 전문성 향상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 추진

※ 평균처리일수 : ('21년) 196일 → ('22년) 234일 → ('23년) 172일

-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180일 이내 사건처리비율 67.3% 및 장기미결사건 비율 2%의 성과달성
- (180일 이내 사건처리 비율) 목표(57.9%) 대비 9.4%p 초과달성
- (장기미결사건 비율) '22년(5.3%) 대비 장기미결사건 비율을 크게 낮춰, 성과목표(4.0%)를 초과달성(2.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기미결사건 비율의 기준을 접수건수대비 장기미결건수 비율보다 차년도 이월건수대비 장기미결건수 비율로 변경 필요

□ 주요성과

-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청구인의 심판과정에 대한 참여요구가 증대에 따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중

* 국선대리인 제도(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소액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처리), 의견진술제도,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등

- 특히,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배정 통지부터 회의 개최 시까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대면·비대면 의견진술을 적극 유도

- 이러한 결과, 전체 의견진술 건수 4,989건 및 순회심판 처리건수 1,953건을 달성

- (의견진술 건수) 적극적인 의견진술 유도 및 납세자 의견진술에 대한 편의성 제고* 등에 따라 목표(4,500건)를 초과 달성(4,989건)

* '23.6월 청사이전으로 의견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등 설치

- (순회심판 처리 건수)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적극적인 순회심판 운영 등을 통해 순회심판 처리 건수는 성과목표(1,000건)를 초과 달성*(1,953건)

* 연도별 순회심판 처리건수 : ('20) 284건 → ('21) 342건 → ('22) 682건 → ('23) 1,953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 주요 성과

○ 새만금사업 중요정책에 대한 통합·조정 지원

- (새만금위원회 개최) 지역사회·지자체·기업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지원단 자체 안전을 적시에 발굴하여 위원회 심의(15회)*

*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8회, 민간위원 간담회 7회 개최

- (관계기관 협의·조정) 지자체·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연·장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협의·조정 역할 수행(11건)*

* 협의·조정 성과 : ①농생명용지 불법임대 관련 대책, ②새만금산업단지 매립 공사 발주기간 단축, ③새만금지역 하수처리 관련 협의·조정, ④챌린지테마파크 통합 개발계획안 보안 협의, ⑤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등

○ 새만금사업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책 적극 반영

-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행*('23.6.28), 새만금사업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11.1) 반영

* 법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10년간 면제 등

** 활력있는 새만금 도시조성: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 지구 지정 및 개발, 도시조성 여건 마련

- (산업용지 확충)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

- (후속조치 이행)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상·하수도 공급, 전력수급 현황 등 후속조치 점검·이행

* 현정부 출범 후 42건, 약 10.1조원 투자유치(총 투자규모 14.8조원의 68%)

** 새만금 산단 전력공급현황 논의, 새만금 오식도 배수지 용수공급 상황 점검, 새만금지역 하수처리 관련 협의·조정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의 현안 및 이해관계 파악을 위해 언론,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소통 확대 필요

□ 주요성과

※ 대규모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5개 과제 점검

⇒ 약 6,100억원의 국가재정 누수 적발 및 60여건의 제도개선 등 탁월한 성과 거양

○ 대규모 재정투입 분야 등의 부패 사각지대 중점 점검으로 약 6,100억원의 국가재정 누수를 적발하는 등 역대 최대의 실적 달성

-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확대점검, ② 지방교육재정 분야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 등 점검으로 재정누수 방지

* ① '22년 1차 점검에 이어 전국 확대점검 및 R&D 분야 추가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총 5,359건, 5,824억원 추가 적발, 약 680억원 환수조치, 525명 수사의뢰

② 전국 17개 지방교육청 대상 점검, 위법·부당 집행사례 등 총 97건, 282억원 적발

③ 부적격자 지급(1,503건), 지연지급(5,826명), 환수조치 미이행(2,190명, 29.5억원) 등 적발

○ 60여건의 제도개선을 통한 고질적·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개선으로 부정부패 예방

- 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② 지방교육재정 분야, ③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

* ① △금융지원사업 관련 대출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재발급 여부 정보 제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② △사립학교 시설공사 계약 사전심사 근거 규정 마련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 물품관리 관련 교육청 자체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

③ △GIS 및 AI 활용 계약인수시스템 도입 △운영비 체계적 점검 강화 △농금융·보험사업자의 검증조사 확대 등 제도개선

④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 및 대학 진학 형태 기준 명확화 △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등 장려금 지연지급 관행 개선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환류를 보다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주요성과

-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2030 NDC 이행로드맵 합리적 조정
 - (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최초 수립('23.4월)
 - (2030 NDC) '21년 NDC 감축목표('18년 比 40%감축)는 준수하면서, 업계여건 및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문별 목표 일부 조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핵심정책 수립·조정
 - 탄녹위 중심 부처간 이견조정 및 심의·의결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多부처 협업·파급효과 큰 다수의 핵심정책* 수립·발표
 - *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방안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디지털 탄소중립 방안 ▲청정메탄올 신산업 육성전략 등
-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소통 강화
 - (전문가) 녹색금융·국제감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개최(총 15회)
 - (이해관계자) 에너지·산업 등 주요 부문별 간담회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의 릴레이 간담회* 병행
 - * ▲자동차 정비업('20.17 完) ▲주유소('23.11.28) ▲농어민('23.12) ▲자동차 부품업('24.1) ▲석탄화력 협력사('24.2) ▲철강 협력사('24.3)
 - (국민·시민사회)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 소통, 네이버를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등 강화 추진
 - * ▲국가 기본계획 공청회('23.3) ▲넷제로프렌즈 운영('23.7~12) ▲기후위기 인식제고 캠페인('23.10~11) ▲'우리를 위한 우리다운 선택' 캠페인('23.11.7~12)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가 기본계획 등 핵심정책의 이행 가속화 및 체계적 점검·환류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조속한 성과 창출 필요

□ 주요성과

- (코로나19) 중대본(본부장:총리)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총괄 및 일상회복 추진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마련(3월) ▲1단계(6월)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격리의무 해제(7일 의무→5일 권고) 등 ▲2단계(8월) :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등

- (약자복지) '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6.09%, 역대 최고수준) 및 생계급여 인상(4인가구 +21.3만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아동 보호체계 정비** 등 추진

* 제6차('23~'27) 장애인정책종합계획(3월, 장애인정책조정위)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4월, 아동정책조정위)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범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12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

- (보건의료) 필수의료 혁신*, 비대면 진료 확대 및 빈대 확산 방지 총괄 대응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 점검·관리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10.20), 관계차관회의(10.31) 등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1차 회의 12월 개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성과 홍보,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등을 통한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 주요성과

- (교권보호) 교권강화 종합방안 마련 및 ▲교권확립을 위한 교원 고시 마련(9.1),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9.15), ▲불합리한 학생 인권조례 개선(안) 마련(11.29)
- (디지털 교육혁신) 학생 모두를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6.8) 에듀테크 진흥방안(9.18) 수립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분야에 '24년 대학 정원 1,829명 순증, 반도체 인재양성에 역량·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8개)하여 산업계 인력 공급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 구축
- (관광혁신) K-ETA 면제국가 확대, MICE 등 국제행사 출입국 패스트 트랙 도입 등 관광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마련
- (강원 2024)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여 대회 준비상황 집중점검·지원 → 대회 성공 개최 기반 마련
- (가족지원)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비전 제시 및 실행력 제고
- (스토킹방지) 「스토킹방지법」 제정('23.7.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스톱킹 예방 및 안정적 피해자 지원 기반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보완 필요
- 교권회복 및 세계잼버리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문제예방 미흡 및 초동대응 지연 등 보완 필요

□ 주요 성과

- (재난·안전) 자연재난(호우·태풍 등) 및 사회재난(화재·안전사고 등) 신속 대응 및 수습·지원, 대책수립 등을 위한 국무총리 보좌 역할 적극 수행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등 재난안전관리 주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조정
 - '23년 풍수해(7월 집중호우, 8월 태풍 '카눈'), 경주 지진 등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실시 (국무총리 주재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사전 안전대책 수립 등)
 - 석유화학산단, 지진 및 민방위대피시설, 주요 지역축제, 교통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환경) 4대강 보 활용방안, 남부지방 가뭄대책 등 환경 분야 주요 대책 수립 및 먼지제거 스프레이 오용 등 부처 간 이견 적극 조정
 - 남부지역(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긴급지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남부 지역 가뭄대책을 수립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안전을 심의·의결
 - 먼지제거 스프레이 마약 오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후위기 및 복합요인으로 향후 재난이 더욱 빈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므로 사전예측 및 대응시스템의 철저한 구축 필요
- 재난 관리에 있어 현장 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주요 성과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97개 세부과제 지속 추진·점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성과 도출

* 정상추진 이행률 : 90%(97개 중 87개)

- 종합계획 시행 4년차로 이행 난이도가 상승한 가운데 총리실 중심 17개 부처가 One-voice로 범정부 미세먼지 정책 추진
- 부문별(산업·수송·발전·생활 등) 효과가 검증된 감축사업 확대 등 적극적 배출감축 노력으로 가시적인 대기질 개선성과 지속 도출*

* 연평균 농도 : ('16) 26 $\mu\text{g}/\text{m}^3$ → ('19) 23 $\mu\text{g}/\text{m}^3$ → ('21) 18 $\mu\text{g}/\text{m}^3$ → ('23) 18 $\mu\text{g}/\text{m}^3$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매년 12월~3월} 대비, 한층 강화된 저감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마련·시행('23.11.24)
- △대형사업장 관리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축소
△취약계층 보호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등 집중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에 이행률보다는 정책성과를 정량화하여 제시할 필요
 - '24년 관리과제 성과지표에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변경 추진
- 취약계층 보호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성과 미흡
 - 미세먼지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수립시('24년 말) 국민건강보호 분야에 취약계층 보호정책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할 계획

□ 주요성과

- (고용·노동) 현안(외국인력,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및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 성과 창출
 - * ('23년 실적)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5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 고용·노동 현안 관리 등을 위한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5회)
 -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3차례 빈일자리 대책 수립* 지원 및 구인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선** 등 추진
 - *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 수립('23.3월, 7월),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 수립('23.10월)
 - ** ▲ '23년도 도입규모 11만명 → 12만명 확대('23.9월), ▲ 하용 업종(배상하차 음식점 호텔콘도 등·기업(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추가('23.9월, 11월, 12월), ▲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대('23.9월)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23.2.21, 5.11)하여 노조 불법행위, 공사방해 등 관행·문화를 개선하고, 특별단속 및 점검 등 실시*
 - * ▲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특별단속('22.12.8~'23.8.14) → 4,829명 송치(구속 148명)
 - ▲ (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23.5.23~'23.8.30) → 179개 현장·333건 적발
 - ▲ (고용부) 채용절차법 집중점검('23.5.12~'23.6.30) 및 노사관계 불법 감독('23.5.12~'23.7.19)
- (식품의약 안전정책 조정) 국민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현안(오염수, 마약 등)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등 마련 →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체계적 관리
 - * ('23년 실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 개최(28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7회) 등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걸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우려 해소 등을 위한 일일브리핑(135회) 추진
 - * ▲ 해양 확산시뮬레이션 발표('23.2.16), ▲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23.5.21~26), ▲ 독자적 과학기술적 검토 발표('23.7.7), ▲ 韓-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구축('23.8.22) 등
 -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치료·재활,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 수립
 -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검·경·관세 합동) 구성하여 수사·단속 총력 대응, 마약류 흐름을 총 망라한 대책 수립,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할 필요

□ 주요성과

○ 정책적 기반 공고화

- 청년정책 여건 변화 및 현정부 청년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하고 청년 삶 쏠분야를 지원하는 시행계획 수립(23.3)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3.27), 청년도약계좌 도입(3.27), 청년 주거안정 강화방안(11.24) 등 청년 삶 개선을 위한 분야별 관계부처 대책 수립 지원
- 청년정책 시행계획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년정책 주요부처(9개) 전담조직 협의회 정례화, 협업·소통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정책 논의 및 부처별 청년대책 발표 지원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24개 전 장관급 기관으로 확대·운영
- 청년 삶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과 지역청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12.13.)

○ 청년 참여기회 확대 및 체감도 제고

- 「청년기본법」(9.22.시행)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의무화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재DB 시스템 구축, 주요 정책 사항은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유튜브·SNS 연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필요

□ 주요성과

- 청년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
 -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용, 지역 맞춤형 청년사업 기획·실행 지원
 - 청년이 직접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공모전(5.14) 개최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기존 9개 시범운영 부처에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 홍보·소통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인지도·체감도 제고
 - 9월 청년의날 및 청년주간 기념식을 개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인지도·체감도 제고에 기여
 - 온라인·SNS 채널을 기반으로 청년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형 이벤트 시행 등을 통해 적극적 청년정책 홍보 수행
- 지역 청년 삶 개선
 - 지자체 협업 회의체 정기 운영, 청년정책 담당자 및 청년기관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교류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정책 추진 지원
 - 서울·대전·광주 등 지역을 순회하며 청년정책공작소(5회, 6~11월)를 운영, 지역 청년 목소리 수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정책은 범부처 사업인 만큼 각 부처 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 추진 필요
-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확대할 필요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국무조정실의 주요 기능은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및 정책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것 (「정부조직법」 제20조)

☐ 핵심 기능

정책조정

- ✓ 국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국무총리 국정운영 뒷받침
- ✓ 경제·민생·사회분야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규제개혁

-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등 기존 규제정비
- ✓ 불합리한 규제신설 억제, 적극행정 선도로 공직혁신

성과관리

- ✓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 ✓ 정부업무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선제적 정책조정을 통한 국정운영의 안정적 관리					
비전	국정을 선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무조정실					
전략 목표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III.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IV.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V. 국민의 생명·안전·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VI.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성과 목표	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4. 국민의 피해회복 지원 및 갈등 조정	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2.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력 확보 3.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4.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1. 국민불편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개선 4. 중복·복합 규제(덩어리 규제)의 종합적 개선	1. 기획재정·금융 ·공정거래 분야 조정· 지원 강화 2. 산업·통상· 에너지·과학 기술·지식재산 ·중소벤처 분야 조정· 지원 강화 3. 농림·국토· 해양 분야의 조정·지원 강화 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1. 보건·복지 분야 조정· 지원 강화 2. 교육·문화· 체육·여성 분야 조정· 지원 강화 3. 안전·환경 분야 조정· 지원 강화 4. 고용노동· 식품의약 분야 조정· 지원 강화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지원 2. 체계·통합· 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지원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IV.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V.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성과지표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 실적

□ 성과지표 개요

〈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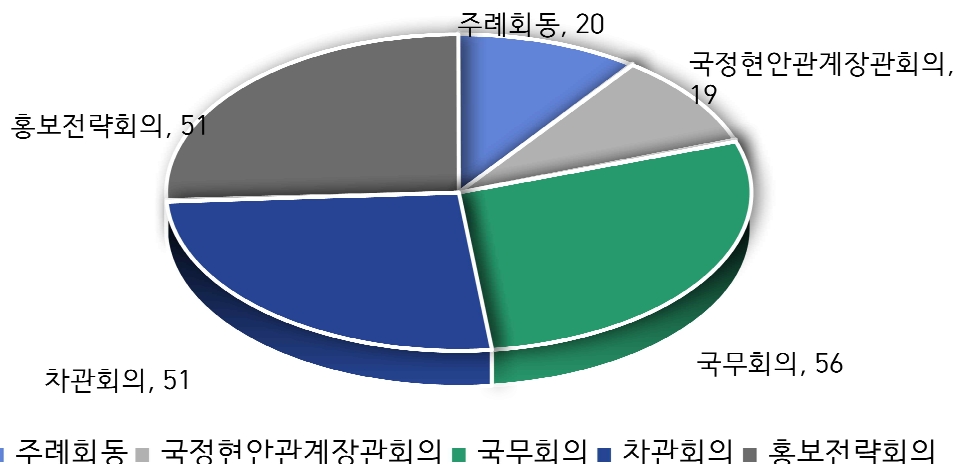
- 개념 : 국정일반, 경제, 사회 분야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적기에 협의·조율하기 위해 실시한 총리, 국조실장 주재 국정협의체 실적
- 산출방법 : 각 협의체 운영 담당 부서 보유 실적 합산
- 산출대상 : 국무총리실 운영 국정협의체

* ▲(대통령 주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국무회의 등
▲(국조실장 주재) 차관회의, 정책홍보전략회의 등

□ 2023년 측정결과

- '23년 국정협의체 운영은 총 197회로,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 등 최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국정 현안 전반을 조정하였습니다.

국정협의체 개최 횟수(건)



□ 성과분석

국정일반 과제

- 국무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특히, 보이스피싱·문지마식 강력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막고, 규제혁신·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및 외교네트워크 확대·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하였습니다.
- 다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리스크 및 갈등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분야 과제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중대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마련('23.3월)하여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격리의무 해제(7일 의무→5일 권고) 및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등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인상(6.09%, 역대 최고수준, '23.9월), 생계 급여 인상(4인가구 +21.3만원) 등을 통해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조실 중심 빈대 확산 방지 총괄 대응 등으로 국민 불안·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24년 대학 정원 순증(1,829명), 반도체특성화대학 집중 육성(8개) 등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23.12월)를 통해 K-ETA 면제국가 확대 등 관광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오송 참사 및 민방공 경보 문자 오발송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상 속 위험 예측 및 현장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분야 과제

- 고물가·고금리, 보호무역주의 등이 증첩되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및 세제 정상화를 통한 민간·시장 중심경제로의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주택공급 기반 확충으로 주택시장 연착륙 및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을 통해 중기·소상공인 권익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국정일반) 국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협의체를 활용하여 적기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로 정책운영의 위험요인을 줄임으로써 국정운영을 안정화하는데 뒷받침하겠습니다.
- (사회분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추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각종 재난 및 전염병 예방 등 국민 건강·안전 확보와 필수의료 혁신, 약자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분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성과지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일반국민·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조사대상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조사방법 : 일반국민·정책수요자(28,800명)를 대상으로 정책 필요성, 적절성, 효과달성도, 전반적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
- 측정산식 : 설문항목별 7점 척도 활용

□ '23년 측정결과

- 윤석열 정부 2년차 120대 국정과제 국민만족도는 7점 만점에 4.6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120대 국정과제 중 복지·미래전략·농업 분야 과제 점수가 높았고, 국정운영·통일·지방시대 분야 과제 점수는 낮았습니다.

□ 성과분석

- '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재정여력 소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의미 있는 국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주요국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물가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역대 최고 고용률(62.6%)과 최저 실업률(2.7%)을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 안정성도 확보하였습니다.

* ('23.11월) 근원물가지수 : (韓)2.8 (美)4.0 (英)5.1 (OECD)6.3 (유로존)4.1

-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지속 추진*하였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 노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유보통합 추진 및 늘봄학교 확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발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
 - ** 총 67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 등
-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지난 정부 5년간 총 인상액보다 더 크게 인상*했고, 기준중위소득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 (4인가구 기준) '23년 월 162만원 → '24년 월 183만원(+13.16%, 21.3만원 인상)
 - ** (4인가구 기준) '23년 540만원(전년 대비 +5.47%) → '24년 573만원(+6.09%)
- 또한, 한미동맹 공고화*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동맹 범위도 첨단기술·문화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양국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 * 워싱턴 선언 채택(4월), 핵협의그룹 출범(7월), 캠프데이비드 합의(8월) 등
- 청년의 미래희망 복원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였고,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일경험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5월)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7월) 등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최초의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4대 특구 전략(11월)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장애요인 등을 점검·관리하는 한편,
-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지표

규제개혁 만족도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수요자·전문가·내부고객 등의 체감 정도 및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로 평가됨('05년부터 조사 실시)
- 기관 : 더퍼스트원
- 대상 : '23년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 34개 중앙행정기관
- 방법 : 전화 및 온라인을 활용한 설문조사(스크리닝 문항 도입)
- 척도 : 설문 항목별 6점 척도 이용한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23년 측정결과

- '23년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전년 대비 1.8점 상승하여, 100점 만점에 75.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 '22년에 비해 전문가(79.4점), 내부고객(79.1점), 정책수요자(72.5점) 등 모든 조사대상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 규제개혁 만족도 >

(단위 : 점)

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종합	61.9	64.1	66.4	67.2	69.4	67.9	68.9	69.2	68.4	68.8	70.0	67.9	71.6	72.7	73.4	75.2	▲1.8 ↑
정책 수요자	59.5	62.9	64.8	65.0	67.6	65.7	67.2	66.5	66.0	66.3	66.5	65.2	69.4	69.6	70.6	72.5	▲1.9 ↑
전문가	66.3	66.5	70.7	72.6	73.1	71.8	72.5	74.3	73.0	73.5	76.4	73.2	76.9	77.8	77.9	79.4	▲1.5 ↑
내부 고객	60.7	63.6	63.9	64.1	68.7	69.0	68.5	70.1	68.9	69.8	71.8	68.5	68.8	73.4	76.7	79.1	▲2.4 ↑

□ 성과분석

-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핵심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였습니다.
-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3월, 8월)를 통해 산단입지·환경·문화재·외국인력 고용 등 중요규제를 혁파하였으며, 부처별 규제혁신TF(39개)을 통해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과 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를 통해 국제관광수지 개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어려운 경제상황 속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킬러규제 혁파TF를 가동하여 킬러규제를 발굴·선정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민생 규제 460여건을 개선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1.22)에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23년말 기준 1,700여건의 규제혁신 과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101조원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24년도에는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 6대 분야*를 선정, 한시적 규제 유예·완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①투자·일자리 규제혁신, ②민생규제 혁신, ③복지규제 합리화,
④신산업 규제혁신, ⑤지역발전 규제혁신, ⑥탄소중립 규제혁신

- 또한, 국민 생활 속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